

전문가가 진단한 정보화법제도 쟁점과 과제- 2009-⑪

##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오병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내용 .....	2
제2장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 .....	5
제1절 정보접근성 .....	5
제2절 정보이용능력 .....	15
제3절 지역간 정보격차 .....	26
제4절 기업과 정보격차 .....	32
제5절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	35
제3장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세부적 보완 .....	44
제1절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지향 .....	44
제2절 취약계층의 새로운 Target positioning .....	47
제3절 새로운 정보환경 및 그에 대한 대응 .....	56
제4절 소결 .....	63
제4장 정보격차해소의 법이론적 과제 .....	65
제1절 새로운 지향점의 도입 .....	65
제2절 정보향유권의 법적 가치 .....	75
제3절 정보수용주체 측면의 정보능력 .....	81
제4절 정보생활 공급 측면의 기반제공 .....	87
제5장 결 론 .....	93
<참고문헌> .....	96

## 표 목차

<표 1> 연도별 중고 PC 보급실적 .....	5
<표 2> 연도별 취약계층 가구 PC 보유율 .....	6
<표 3> 정보통신보조기기 수요 .....	7
<표 4> 정보통신기기 판매가격 .....	7
<표 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현황 .....	8
<표 6> 통신중계서비스 사업 추진단계 .....	9
<표 7> 연도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실적 .....	9
<표 8> 웹 접근성 관련 주요 표준 .....	10
<표 9> 전자정부 사이트 웹 접근성 준수현황 .....	13
<표 10> 연도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	14
<표 11>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업 운영현황 .....	16
<표 12> 장애인 IT전문인력 양성교육실적 .....	17
<표 13> 장애유형별 정보화도우미 서비스 운영현황 .....	17
<표 14> 장노년층 연령대별 일반국민 대비수준 .....	18
<표 15> 최근4년 간 교육실적 .....	19
<표 16> 교육수준별 교육실적 .....	19
<표 17> 장·노년층의 인터넷이용률 .....	20
<표 18> 인터넷 이용률 .....	21
<표 19> 연도별 교육기관 수 및 교육실적 .....	22
<표 20> 2008년 자격증 취득현황 .....	23
<표 21> 관·민·학 협력현황 .....	23
<표 22> 연도별 온라인정보화교육 실적 .....	24
<표 23> E러닝 콘텐츠 보급 현황 .....	25

<표 24> 연도별 강사지원단 운영실적 .....	25
<표 25> 연도별 내고향 IT봉사단 운영실적 .....	26
<표 26> 시도별 가구 컴퓨터 보유율 격차 추이 .....	27
<표 27>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 .....	30
<표 28> 정보화마을 PC 보유율 및 인터넷 이용률 .....	30
<표 29>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대상 중소기업 현황 .....	32
<표 30> 지방자치단체별 IT도우미 현황 .....	32
<표 31> IT도우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 .....	33
<표 32> 기업의 사회공헌비용 총지출규모 추이 .....	34
<표 33> 기업의 직접운영 프로그램 운영 현황 .....	34
<표 34>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기본 구축 시설 .....	35
<표 35>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유지·보수 현황 .....	36
<표 36> 권역별 중고PC 해외보급 실적 .....	37
<표 37> 연도별 IT 전문가 초청연수 추진실적 .....	38
<표 38>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39
<표 39> 교육을 통한 한국에 대한 태도변화 .....	39
<표 40>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현황(2001~2008) .....	40
<표 41> 2008년도 개도국 전자정부 컨설팅사업 주요 활동내역 .....	41
<표 42> 2008년도 개도국 국가정보화 컨설팅사업 주요 활동 내역 .....	42
<표 43> 개도국 방송통신 자문사업 주요실적 요약 .....	42

## 그림 목차

<그림 1> 일반인과 장애인의 정보이용 실태 비교 .....	15
<그림 2> 2008 국민정보화교육의 효과 및 성과분석 .....	20
<그림 3> 시도 정보화 투입 불평등 곡선(불평등 계수) .....	28
<그림 4> 시도 정보화 변화관리 불평등 곡선 .....	28
<그림 5> 시도 정보화 활용 불평등 곡선 .....	29
<그림 6> 시도 정보화 성과부문 불평등 곡선 .....	29
<그림 7>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실적 .....	31
<그림 8> 취약계층간 부문별 정보격차 지수 .....	48
<그림 9> 직업별 정보역량 수준 .....	48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은 2000년대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수립되어 현재까지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정보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어떠한가를 평가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정보격차해소의 성과가 어떠한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정보접근중심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가 또는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꾸준히 추진되어온 정보격차해소사업에서도 미진한 점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어떠한 미해결의 과제들이 남아있는가를 밝히고, 또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보격차문제를 야기시키는 현상을 찾아내는 것이 이 연구의 현실적인 정책대안 제시로서의 목적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지금까지의 정보격차해소의 구체적 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므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정보격차해소라는 개념이나 패러다임이 과연 향후의 보다 발전된 정보사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를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격차"의 개념이 갖는 개념내재적인 한계

## 2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와 "정보접근권"의 주체가 특정 정보취약계층이나 정보소외계층에 국한되는 편협성을 법이념적으로 극복하는 대안제시가 가장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주체로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각자의 역량 수준에 따른 국가의 역할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접근중심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면, 향후에는 어떠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를 법이론적으로 새롭게 조망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다. 이와 같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개념과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접근중심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올바른 지향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현재까지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추진 성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접근성의 분야에서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 청각장애인의 통신중계서비스 사업 성과와 웹접근성이 얼마만큼 준수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정보이용능력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층의 정보화교육, 다문화 가정의 정보화교육, 수용자의 정보화교육 그리고 기타 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의 성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지역간 정보격차가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는 기업의 정보격차의 실태를 분석하고, 끝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가간 정보격차의 해소

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 기존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실용정책,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정보복지의 실현, 정부-민간 협력이라는 4대 정책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농어민층 및 장노년층과 다문화가정을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재설정하고, 디지털 TV와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 대응한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세부적 보완책을 제시한다. 이러한 세부적 보완책은 기존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정보복지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부적 보완책은 정보격차라는 개념의 내재적 한계와 이념적 한계로 인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격차를 해소하거나 정보기회의 확대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전 국민의 정보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체계화하여 제시한다. 먼저 새로운 지향점을 도입하기 위해 현행 "정보격차" 개념의 협소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좁은 의미의 정보격차는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소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정보격차 개념을 발전적으로 폐기하고 "정보생활"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정보향유권"이라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정보향유권의 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 정보사회의 행복추구권, 정보향유의 평등권, 인간다운 정보생활을 할 권리로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국민의 정보향유권이 실현되는 정보생활을 완성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수요측면의 정보능력

#### 4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으로서 "정보접근능력", "정보수용능력", "정보활용능력"을 단계화하여 체계화 하는 동시에 정보생활 공급측면으로서 국가의 "접근 기반구축", "지식 기반구축", "활용 기반구축"의 3단계가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제2장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

### 제1절 정보접근성

#### 1.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정보를 접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첫째, 정보통신기기 즉 PC가 있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PC가 정보통신망에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소외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중고 PC를 보급하는 사업을 통하여 일반인들과 정보소외계층간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왔으며, 중고 PC 보급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국내외에 총 194,771대를 보급하였다.

<표 1> 연도별 중고 PC 보급실적<sup>1)</sup>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개인	18	68	322	1,506	1,592	2,175	7,490
기관 (기관수)	704 (21)	1,313 (196)	1,759 (61)	1,961 (162)	3,493 (254)	7,719 (839)	8,950 (1,347)
해외 (국가수)	-	185 (2)	-	-	60 (3)	430 (6)	2,161 (14)
계	722	1,566	2,081	3,467	5,145	10,324	18,601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개인	7,223	10,154	11,455	12,600	12,404	67,007	
기관 (기관수)	11,340 (1,223)	11,865 (1,682)	15,239 (2,446)	25,469 (1,972)	17,842 (3,310)	107,654 (13,513)	
해외 (국가수)	2,017 (9)	3,553 (15)	3,837 (14)	4,466 (19)	3,401 (23)	20,110 (41)	
계	20,580	25,572	30,531	42,535	33,647	194,771	

1)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94면.

## 6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이렇게 중고 PC 보급을 추진한 결과 <표 2>와 같은 격차해소의 성과를 나타내었으며<sup>2)</sup>, 동시에 정부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농어촌을 대상으로 총 377만 가구의 99.8%인 376만 가구에 대하여 인터넷 사용환경을 조성하였다<sup>3)</sup>.

<표 2> 연도별 취약계층 가구 PC 보유율<sup>4)</sup>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보유율	격차	보유율	격차	보유율	격차
취약 계층	장애인	68.7	10.9	69.9	10.5	70.7	10.2
	저소득층	57.7	21.9	61.3	19.1	63.1	17.8
	농어민	50.2	29.4	55.0	25.4	57.4	23.5
	평균	60.1	19.5	63.4	17.0	65.1	15.8
전체국민		79.6	-	80.4	-	80.9	-

※격차는 전체 국민과 취약계층간 차이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층 기준임

## 2.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이 되는 PC만 있다고 정보접근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보조기기는 그 시장이 좁고 그러한 이

2)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92면.

3)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92면.

4)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92면.

유로 판매단가가 고가인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 3> 정보통신보조기기 수요<sup>5)</sup>

구분	전체	중증(1~3급)	경증(4~6급)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136,637명	102,467명	34,170명
없으면 불편한 장애인	228,607명	180,704명	47,903명
계	365,244명	283,171명	82,073명

<표 4> 정보통신기기 판매가격<sup>6)</sup>

(단위, 천원)

장애유형	품목	가격대
지체·뇌병변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100 ~ 1,650
	입력보조기	38 ~ 515
시각	스크린리더	350
	점자정보단말기	5,500
	탁상형 독서확대기	2,850
	휴대용 음성출력기	540 ~ 1,470
청각·언어	영상전화기	425
	콜도기기	245

이러한 정보통신기기들에 대한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5)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00면.

6)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01면.

## 8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표 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현황<sup>7)</sup>

구분	보급품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시각	스크린리더	1,654	624	468	788	622	1,813	5,969
	독서확대기	-	-	63	457	381	387	1,288
	점자단말기	100	-	68	-	72	152	392
	음성출력기	-	-	-	133	300	449	882
	화면확대S/W	-	-	-	-	25	192	217
지체/ 뇌병변	입력보조기	29	25	12	133	292	926	1,417
	특수마우스	14	113	79	112	62	120	500
	특수키보드	37	107	328	75	489	245	1,281
	입력패키지	-	-	-	387	207	21	615
	의사소통보조기	-	-	-	112	129	-	241
	입력보조S/W	-	29	4	8	2	31	74
청각/ 언어	영상전화기	517	200	262	322	-	497	1,798
	의사소통보조기	-	-	-	-	-	1,593	1,593
	음성증폭기	-	17	-	-	-	36	53
	콜도기기	-	-	-	32	137	64	233
공통	PC	3,307	-	300	-	-	-	3,607
계		5,658	1,115	1,584	2,559	2,718	6,526	20,160

### 3. 통신중계서비스

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5년 11월부터 제공되기 시작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단계별 목표에 따라 추진 중이며, 2009년 현재 확산단계에 접어들어 추진 중으로 파악되고 있다.

7)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03면.

<표 6> 통신중계서비스 사업 추진단계<sup>8)</sup>

구분	단계별 목표
도입단계 (‘05~’07)	- 시범서비스 실시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방향 설정
확산단계 (‘08~’10)	- 서비스 제공 규모 및 수혜 대상 확대 - 안정화 단계에 적용 가능한 시행체계 수립 및 법제화 추진
안정화단계 (‘11~ )	-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들 간 통신을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청각·언어장애인들과 통신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비스로서 매년 확대 제공되고 있다.

<표7> 연도별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실적<sup>9)</sup>

구분	2005 (11월~12월)	2006	2007	2008
중계사 수(명)	3	5	14	29
회원 수(명)	200	700	1,800	4,038
서비스 일 수(일)	43	241	295	335
중계건 수(건)	2,021	33,371	108,315	191,808
평균통화시간	7분02초	6분42초	6분38초	6분 8초
서비스 제공시간	주5일(월~금) 10:00~19:00 일일 9시간	주5일(월~금) 09:00~21:00 일일 12시간	주6일(월~토) 09:00~21:00 일일 12시간	주7일 09:00~22:00 일일 13시간
문자 : 영상	73 : 27	81 : 19	66 : 34	58 : 42

8)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08면.

9)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07면.

#### 4. 웹접근성 준수

2005년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고 난 후 웹 접근성의 기초가 되는 주요 표준이 다양하게 제정되고 있다. 이는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웹 접근성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표 8> 웹 접근성 관련 주요 표준<sup>11)</sup>

표준 종류	표준명칭	표준번호	제정년도
국가 표준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KICS.OT-10.0003	2005.12.21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KICS.KO-09.0040	2007.10.19
단체 표준	한국형 웹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1.0	TTAS.OT-10.0074	2006.12.27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1.0	TTAS.OT-09.0001	2006.12.27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TTAS.KO-10.0213	2006.12.27
	한국형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 1.0	TTAS.OT-10.0073	2006.12.27
	전자문서 접근성 지침 1.0	TTAS.OT-10.0122	2007.12.26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지침 1.0	TTAS.KO-06.0152	2007.12.26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	TTAS.KO-06.0181	2008.8.28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TTAS.KO-06.0180	2008.8.28

10)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15면.

11)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22면.

또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가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됨에 따라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명	규정 내용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09.5.22 법률 제9705호)	<p>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li> <li>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li> </ol>

**12**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p>국가정보화 기본법 (법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09.5.22 법률 제9705호)</p>	<p>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4.10 법률 제8341호)</p>	<p>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2002년 이후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사이트를 평가하고 있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로 2008년까지 3년 연속 1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접근성 부문에서는 아래 표를 보는 바와 같이 57%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9> 전자정부 사이트 웹 접근성 준수현황<sup>12)</sup>

구분	평가대상	브루킹스연구소 평가결과
1	전자민원 G4C(www.egov.go.kr)	0
2	대한민국 전자정부(www.korea.go.kr)	0
3	청와대(www.president.go.kr)	1
4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	0
5	통일부(www.unkorea.go.kr)	1
6	환경부(www.me.go.kr)	1
7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0
8	기획재정부(www.mosf.go.kr)	0
9	국회(www.assembly.go.kr)	1
10	외교통상부(www.mofat.go.kr)	1
11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1
12	법무부(www.moj.go.kr)	1
13	국방부(www.mnd.go.kr)	0
14	지식경제부(www.mke.go.kr)	1
평균		8(57%)

12)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17면.

#### 14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하지만, 이러한 웹 접근성 관련 표준 등에 대한 준수 실태를 아래의 표로 확인해보면 해가 거듭 될수록 준수 실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연도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sup>13)</sup>

구분	2005	2006	2007	2008
중앙행정기관	72.3 (56개 기관)	81.8 (58개 기관)	88.2 (57개 기관)	90.6 (46개 기관)
입법,사법, 헌법기관	72.2 (4개 기관)	82.7 (4개 기관)	86.6 (4개 기관)	89.5 (4개 기관)
전자정부	77.1 (1개 기관)	78.4 (1개 기관)	74.0 (19개 기관)	80.3 (20개 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71.6 (16개 기관)	81.8 (16개 기관)	86.8 (16개 기관)	91.6 (16개 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77.6 (230개 기관)	83.3 (230개 기관)
공기업				77.5 (24개 기관)
준정부기관				73.7 (77개 기관)
국립대학 교				72.1 (52개 기관)
기타				80.4 (34개 기관)
소계	72.2 (77개 기관)	81.8 (79개 기관)	79.8 (326개 기관)	81.0 (503개 기관)

13)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16면.

## 제2절 정보이용능력

### 1. 장애인 정보화 교육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정보화를 통한 일자리는 육체적으로 요구되는 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도 정보화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급속한 정보화의 발전에 비하여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그림 1> 일반인과 장애인의 정보이용 실태 비교<sup>14)</sup>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1999년의 경우 3,099명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63,281명이 교육을 받아 2008년까지 총 377,030명이 교육을 받았다.

14)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26면.

16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표 11>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업 운영현황<sup>15)</sup>

(단위 : 명)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교육 실적	집합 교육	3,099	10,660	14,397	21,224	20,712	62,722	54,551	56,273	55,592	59,084	358,314
	방문 교육					1,447	2,244	3,142	3,408	3,716	4,012	17,969
	전문 교육						80	128	170	184	185	747
상담 실적	계	3,099	10,660	14,397	21,224	22,159	65,046	57,821	59,851	59,492	63,281	377,030
	전화 상담						608	3,269	7,486	12,079	12,600	36,042
	방문 상담						268	2,310	4,685	6,169	6,811	20,243
	계						876	5,579	12,171	18,248	19,411	56,285

장애인정보화 교육은 장애유형에 따라 정보화교육의 형태가 다르다. 우선 일반 장애인들은 전용 정보화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가 장애인은 방문교육, 그리고 직무활용이 가능한 정도인 장애인들은 IT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sup>16)</sup>.

15)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자료(2009. 12)

16) 1999년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시작된 초기에는 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에서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나, 2003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장애인 IT전문인력을 양성교육이 시작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28면.

<표 12> 장애인 IT전문인력 양성교육실적<sup>17)</sup>

(단위 : 계, 명, %)

연도	교육기관수	교육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취업자수	취업률
'04	7	92	80	87.0	22	27.5
'05	10	154	128	83.1	24	18.8
'06	12	208	170	81.7	53	31.2
'07	12	200	184	92.0	70	38.0
'08	13	205	185	90.2	71	38.4
계	54	859	747	87.0	240	32.1

<표 13> 장애유형별 정보화도우미 서비스 운영현황(전화상담/방문서비스)<sup>18)</sup>

(단위 : 명)

	구분	시각	정신지체	지체	청각	기타	합계
2004	전화상담	364	22	152	4	66	608
	방문서비스	171	16	73	1	7	268
	소계	535	38	225	5	73	876
2005	전화상담	1,430	261	1,294	54	230	3,269
	방문서비스	1,011	160	963	120	56	2,310
	소계	2,441	421	2,257	174	286	5,579
2006	전화상담	3,053	693	3,183	221	336	7,486
	방문서비스	1,892	406	2,180	152	55	4,685
	소계	4,945	1,099	5,363	373	391	12,171
2007	전화상담	4,368	981	5,527	380	823	12,079
	방문서비스	2,173	544	3,001	363	88	6,169
	소계	6,541	1,525	8,528	743	911	18,248
2008	전화상담	4,887	1,013	5,285	503	912	12,600
	방문서비스	2,328	562	3,088	464	369	6,811
	소계	7,215	1,575	8,373	967	1,281	19,411
계	전화상담	9,215	1,957	10,156	659	1,455	36,042
	방문서비스	5,247	1,125	6,217	636	206	20,243
	소계	14,462	3,082	16,373	1,295	1,661	56,285

17)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자료

18)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 자료

## 18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한편, 2004년부터는 장애인의 정보화교육 외에도 정보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까지 396명의 도우미가 전국에서 활동 중이며, 총 20,243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sup>19)</sup>.

### 2. 고령층 정보화 교육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고령층의 정보화는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표 14> 장노년층 연령대별 일반국민 대비수준

구분	50~59세		60세 이상		50세 이상		55세 이상	
	'07년	'08년	'07년	'08년	'07년	'08년	'07년	'08년
종합	79.8	80.7	47.6	49.8	62.6	64.2	53.3	55.8
접근	101.0	101.3	80.6	84.7	90.1	92.5	84.6	88.4
역량	52.2	53.5	17.5	18.2	33.7	34.5	23.5	24.8
활용	66.4	68.2	23.2	24.4	43.3	44.9	30.9	32.5

※자료 : 2008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KADO)

※대비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소외계층의 정보화수준을 의미

※종합 정보화 수준은 접근·역량·활용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보화 수준을 의미

지난 2000년부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55세 이상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1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29면.

&lt;표 15&gt; 최근4년 간 교육실적

구분	집합교육	방문교육	계
2005년	59,346	754	60,127
2006년	71,622	4,065	75,687
2007년	75,537	3,825	79,362
2008년	23,061	2,903	25,964

※연관기관 : 대학, 민간, 후원 교육장

※전용교육장 : 우체국, 노인정보화교육장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자료

&lt;표 16&gt; 교육수준별 교육실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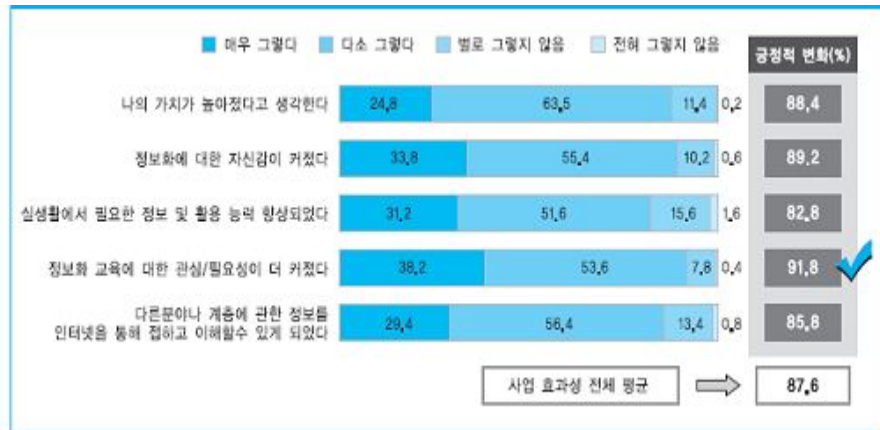
구분	총 교육인원	교육수준			
		기초		실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5년	60,127	33,393	55.5	26,734	44.5
2006년	75,687	46,224	61.1	29,463	38.9
2007년	79,362	45,154	56.9	34,208	43.1
2008년	25,964	15,633	60.2	10,331	39.8

※자료 : 한국정보화 진흥원 내부자료

※기초 : 컴퓨터, 인터넷, 한글 등 / 실용 : 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등

다음의 그림을 보면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나의 가치와 정보화에 대한 자신감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실생활에 유용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20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그림 2> 2008 국민정보화교육의 효과 및 성과분석

<표 17> 장·노년층의 인터넷이용률

구분	50세 이상	5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인터넷이용률(%)	35.6	26.4	20.0	11.7

※자료 : 2008 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2008. 1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3. 다문화 가정 및 비문해자를 위한 정보화 교육

2008년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총 14만 4천여 명이며, 다문화가족 자녀는 5만 8천여 명이다. 이는 세계화와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남으로서 우리나라도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기존 비문해자와 함께 대부분이 한글 해독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에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비문해자는 아니더라도 교육정도에 따라 인터넷 이용

률이 다른 점을 알 수가 있듯이 이러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

<표 18> 인터넷 이용률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이용률	65.5%		70.2%		7.8%		74.8%		76.3%		77.1%	
	이용자수	2,922만명		3,158만명		3,412만명		3,412만명		3,482만명		3,536만명	
계층별		이용률(%)	격차(%p)	이용률(%)	격차(%p)	이용률(%)	격차(%p)	이용률(%)	격차(%p)	이용률(%)	격차(%p)	이용률(%)	격차(%p)
학력별	대졸이상	89.1	-	92.7	-	94.5	-	95.5	-	96.9	-	97.1	-
	고졸	59.6	-29.5	67.0	-25.7	73.4	-21.1	74.7	-20.8	78.2	-18.7	78.2	-18.9
	중졸이하	7.5	-81.6	17.2	-75.5	22.6	-71.9	23.1	72.4	33.8	-63.1	34.0	-63.1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자료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부터 비문해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2006년부터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화를 실시하였다. 2008년까지 교육기관은 총 174개이고, 교육인원은 63,835명임을 알 수 있다.

<표 19> 연도별 교육기관 수 및 교육실적

(단위 : 개소,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교육기관	비문해자	16	93	148	166	160	150	150
	여성결혼이민자	-	-	-	15	25	24	24
	소계	16	93	148	166	185	174	174
교육인원	비문해자	-	5,527	11,366	13,787	14,565	13,437	58,682
	여성결혼이민자	-	-	-	913	1,852	2,388	5,153
	소계	-	5,527	11,366	14,700	16,417	15,825	63,835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자료

※비문해자 정보화교육이란 한글 등 문자해독을 하지 못하는 성인·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활용한 문자교육의 효율성 증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 4. 보호소년 및 수용자 정보화 교육

법무부는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소년과 교정기관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은 이들의 재사회화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2008년 개발된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유형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보화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sup>20)</sup>. 또한 2008년 1월 기준으로 전국 159개소의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고 총 6,900여대의 PC를 설치하는 등 정보화교육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수용자들의 정보화교육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자격증취득과정을 개설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sup>21)</sup>.

20)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50면.

&lt;표 20&gt; 2008년 자격증 취득현황

자격증 유형	인원	자격증 유형	인원
E-TEST	18	사진기능사	4
문서실무사	234	컴퓨터활용능력	93
정보처리기능사	49	ITQ(정보기술자격)	839
PC정비사	152	그래픽스운용기능사	52
워드프로세서	1,452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27
정보기기운영기능사	207	과학소양인증자격증	2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2	직업훈련 일반	844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2008)

&lt;표 21&gt; 관·민·학 협력현황

연 번	기 관 명	협 력 기 관, 단 체 등	연 번	기 관 명	협 력 기 관, 단 체 등
1	서울(소)	동아방송대	17	여주(교)	산업인력공단
2	제주(소)	제주대	18	영등포(구)	유한대, 삼성SDS
3	강릉(교)	영동대, 도립대	19	영등포(구)	홍익대
4	경주(교)	울산기능대	20	원주(교)	원주, 한라대
5	광주(교)	전남과학대	21	의정부(교)	신흥대
6	군산(교)	군장대	22	인천(구)	가천길대
7	대구(구)	경북과학대, 대경대 경북외국어테크노대	23	장흥(교)	남도도립대
8	마산(교)	창신대, 마산대 등 4개	24	전주(교)	기전대
9	목포(교)	목포과학대	25	진주(교)	경상대, 연암공업대
10	부산(교)	경남정보, 부산기능대	26	천안(지)	남서울대
11	부산(구)	경남정보대	27	천안소 (교)	공주대, 천안공과대, 충청대
12	부산(구)	경남정보대, 금강컴퓨터학원	28	청송(교)	카톨릭상지대, 산업인력관리공단
13	서울(구)	계원조형예술대	29	춘천(교)	강원대
14	성동(구)	경원대	30	충주(구)	송덕학교
15	수원(구)	경기대	31	포항(교)	KT
16	순천(교)	청암대	32	홍성(교)	홍성대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2008)

21)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51면.

## 24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또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지역별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과 민간 및 학교가 협력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정부는 1997년 자원봉사진으로 구성된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 활동을 시작으로 2001년 정보화교육 사이트인 “배움나라([www.estudy.or.kr](http://www.estudy.or.kr))”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100만 여명이 교육을 받았다<sup>22)</sup>.

<표 22> 연도별 온라인정보화교육 실적

(단위 : 명, 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교육인원	16,394	91,008	152,191	139,440	150,007	145,986	161,056	146,003	1,002,085
과정운영	9	22	34	46	58	70	82	82	-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자료, 2008

또한 2004년 “취약계층 500만 교육계획” 및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을 통해 교육콘텐츠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sup>23)</sup>,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e러닝 콘텐츠를 보급하여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상시학습을 유도하여 성과를 높이고 있다.

22)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55면.

23)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55면.

&lt;표 23&gt; E러닝 콘텐츠 보급 현황

(단위 : 종, 개소)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지원과정	18	40	99	90	5	56	102	410
기관수	2	3	7	9	1	6	9	37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자료, 2008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은 강사가 부족해서 정보화교육을 할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 등에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정보화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는 신규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lt;표 24&gt; 연도별 강사지원단 운영실적

(단위 : 명, 개)

구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등록 강사	1,006	1,990	2,348	2,153	2,459	2,452	944	1,033	1,058	-
지원 기관	1,365	696	1,523	273	323	318	247	250	298	5,293
실적	37,854	28,226	49,195	52,072	47,893	57,770	63,172	55,566	56,487	448,235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자료, 2008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과 유사하게 대학생으로 구성된 “내고향 IT 봉사단”은 방학기간 동안에 농어촌 지역에 파견되어 집합교육, 방문교육 및 PC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sup>24)</sup>.

24)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155면.

## 26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표 25> 연도별 내고향 IT봉사단 운영실적

(단위 : 개 명, 시간)

구분	봉사단 구성			활동 마을	운영실적				합 계
	참가 대학	팀 수	참여 인원		정보화 교육	PC점검 및 수리	정보화 상담	기타봉사 (시간)	
2003	44	61	681	61	2,611	944	650	-	4,205
2004	53	63	925	66	3,194	1,600	707	-	5,501
2005	66	98	693	103	2,494	2,823	1,401	-	6,718
2006	75	128	1,173	154	3,007	4,033	1,877	-	8,917
2007	72	144	1,138	154	3,184	4,376	1,822	(2,128)	9,382
2008	78	184	1,134	150	1,790	2,845	1,235	(3,197)	5,870
계	388	678	5,744	688	16,280	16,621	7,692	5,325	40,593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자료, 2008

### 제3절 지역간 정보격차

#### 1. 지역간 정보격차

기존에 문제가 되던 지역간 인구, 산업, 재정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간 정보격차는 기존의 격차와 결합되어 더욱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지역간 정보화 기반의 격차에 대하여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보유율이 정체기에 있거나 미미한 변동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지역이 80%대의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 경북, 충남 지역은 60%대의 낮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26> 시도별 가구 컴퓨터 보유율 격차 추이<sup>25)</sup>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76.9	78.6	77.9	77.8	78.9	79.6	80.0	80.9
지 자 체	서울	87.1	89.0	86.6	87.3	87.5	87.8	88.0
	부산	69.7	72.0	80.7	81.2	81.3	82.6	82.6
	대구	72.9	73.7	74.2	75.6	76.7	78.0	78.0
	인천	85.1	86.5	88.2	82.3	83.2	84.2	85.1
	광주	69.1	71.3	78.1	83.5	84.3	84.5	84.6
	대전	81.1	83.2	79.7	81.5	82.2	82.9	83.4
	울산	88.8	88.1	84.6	85.7	86.8	86.7	86.8
	경기	84.2	88.1	85.7	85.0	85.0	85.0	85.1
	강원	65.0	64.3	68.7	70.3	70.6	72.5	76.0
	충북	64.0	72.2	69.6	71.2	71.4	73.8	74.4
	충남	67.3	68.8	64.6	65.2	67.2	68.6	68.9
	전북	72.0	75.8	66.1	64.9	66.1	68.0	70.1
	전남	63.7	63.8	58.8	60.5	62.5	64.7	65.5
	경북	61.0	59.7	61.7	61.8	64.4	65.3	65.6
	경남	64.0	65.0	65.7	66.0	66.7	67.8	68.4
	제주	85.7	73.5	69.4	70.6	71.1	75.0	75.1

##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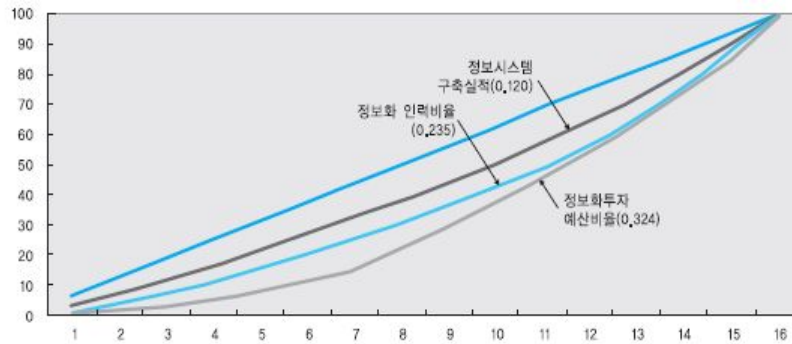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격차의 또 다른 지표로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시도 정보화 투입 부분에 대한 항목별 격차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sup>26)</sup>.

또한 시도 정보화 변화관리부분의 정보격차를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아서 정보화 교육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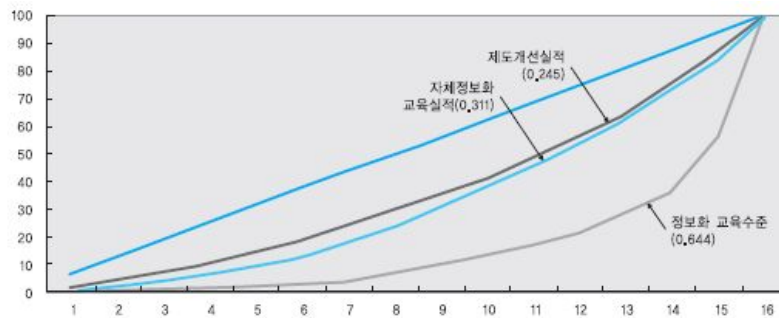
25)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283면.

2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285면.

## 28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그림 3> 시도 정보화 투입 불평등 곡선(불평등 계수<sup>27)</sup>)<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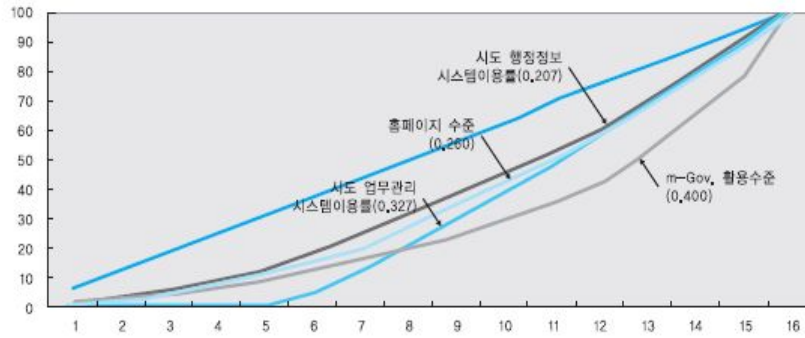
<그림 4> 시도 정보화 변화관리 불평등 곡선<sup>29)</sup>

시도 정보화 활용부분에 대한 정보격차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m-Gov 활용 수준의 경우에는 0.400으로 큰 정보격차를 보여주며,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이용률이나 시도 업무관리시스템 이용률 그리고, 홈페이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정보격차가 덜 한 것을 볼 수 있다.

27) 이 그림에서 사용된 지니계수는 불평등 수준을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통상 0.4 보다 크면 격차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28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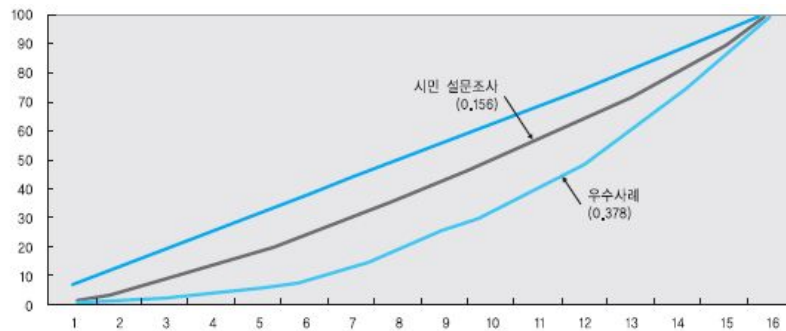
28)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286면.

29)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286면.



<그림 5> 시도 정보화 활용 불평등 곡선<sup>30)</sup>

시도 정보화 성과부분에 대한 정보격차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그 격차가 크지는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정보화 추진 부분의 지역간 정보격차는 정보화 교육수준과 m-Gov 활용수준 등에서 격차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시도 정보화 성과부분 불평등 곡선<sup>1)</sup>

30)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287면.

### 3. 정보화마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이용을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1년 24개 마을로 시작하여 2009년 현재 358개 마을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산물의 전자상거래와 농촌체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7>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sup>31)</sup>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마을수	22(6)	75(3)	82(10)	70	19(19)	26(15)	34(23)	30(17)	358(93)

※ ( )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성한 마을임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화마을이 조성된 이후에는 PC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 등이 높아졌고, 이를 통한 농작물 가격 조회, 농작물 재배 정보교류, 온라인 교육 등 다방면에서 정보이용환경이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정보화마을 PC 보유율 및 인터넷 이용률<sup>32)</sup>

구분	정보화마을 평균		농어촌 평균	전국 평균	비고
	조성 전	조성 후			
PC 보유율	37.3%	72.1%	57.4%	80.9%	2008년 기준
인터넷 이용률	9.1%	66.5%	35.2%	77.1%	

3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289면.

3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291면.

특히 인빌쇼핑([www.invil.com](http://www.invil.com))과 인빌체험([tour.invil.com](http://tour.invil.com))을 통한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은 2006년 30억원, 2007년 45억원, 2008년 91억원을 판매하여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농촌체험 상품의 매출도 2006년 5.7억원, 2007년 14억원, 2008년 2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 오프라인 판매실적 제외

<그림 7>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실적(단위 : 백만원)<sup>33)</sup>

정보화마을은 매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보화마을 간 경쟁을 유발함과 동시에 부진한 정보화 마을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외국에도 지역의 정보격차해소 우수사례로 부각되어 2007년 20여개 나라에서 총 22회에 걸쳐 410명이 정보화마을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고, 2008년에도 일본 전자정부단, 아프가니스탄 정보통신부장관, 아시아 태평양 지역 OECD 공무원 등 35개국에서 19회에 걸쳐 246명이 벤치마킹을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방문하였다<sup>34)</sup>.

33)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292면.

## 제4절 기업과 정보격차

## 1. IT도우미

IT 도우미는 정보화 수준이 낮고 정보화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지방의 영세한 중소기업<sup>35)</sup>에 대하여 맞춤형 정보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다.

〈표 29〉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대상 중소기업 현황<sup>36)</sup>

구분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계
기업 수	105	91	71	21	28	316

〈표 30〉 지방자치단체별 IT도우미 현황<sup>37)</sup>

구분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계
고급 IT도우미	14	13	11	4	7	49
중급 IT도우미	47	48	46	8	12	161
경영 컨설턴트	18	7	10	4	6	45
계	79	68	67	16	25	255

34)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292~293면.

35)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중 99.9%(302만개)를 차지하고 고용된 종업원의 수도 87.5%(1,088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기업(88.6%)이고, 기업 당 평균 종업원의 수는 4명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력과 정보화시스템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5년 이상 생존율이 2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296면.

36)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297면.

37)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298면.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IT도우미 활동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약 64.2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IT도우미 참여자 가운데 2009년 2월말까지 15명이 관련 분야에 취업하였고, 29명이 창업을 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실업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 IT도우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sup>38)</sup>

구분		성과	비고
직접적 효과	소기업 부문	45억 8,448만원	생산성 향상 및 IT투자 절감액의 경제적 효과
	IT도우미 부문	4억 6,417만원	전문성 등 역량강화의 경제적 효과
간접적 효과	소기업 부문	13억 7,586만원	IT투자 유발액 (2008~2009년)
	IT도우미 부문	취업 15명 창업 29명	2009년 2월말 까지

## 2. 기업의 정보격차 해소 기여

2000년대 들어서 정부차원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정보격차의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정보격차해소의 노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래의 표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출한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액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8)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02면.

**34**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표 32> 기업의 사회공헌비용 총지출규모 추이<sup>39)</sup>

구분	1998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지출 비용	332,710	706,060	1,086,594	1,228,432	1,402,510	1,804,816	1,955,642

또한 기업들은 일회성의 단순 기부형태에서 기업의 사업분야와 연관되는 분야의 사회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직접운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표 33> 기업의 직접운영 프로그램 운영 현황<sup>40)</sup>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기부금	68.0%	64.3%	56.7%	54.9%
직접운영 프로그램	32.0%	35.7%	43.3%	45.1%

이러한 예로는 중고PC를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운동을 하는 안철수 연구소의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운동”과 삼성SDS의 “IT나눔봉사단”과 “IT나눔 플라자” 그리고 SK C&C의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 “희망의 PC 기증사업”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기업협회의 정보문화 활동 등이 있다<sup>41)</sup>.

39)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04면.

4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05면.

4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05면 이하 참조.

## 제5절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 1.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IT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여 개도국에 우리나라 IT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개도국에 정보화교육장, 인터넷 라운지, 세미나 실로 구성된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sup>42)</sup>.

<표 34>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기본 구축 시설<sup>43)</sup>

구분	규모	지원내역	비고
정보화 교육장	31석	· PC 31대 · 복합기 1대 · 빔프로젝터 1세트 · A/V장비 및 교육장비 등	강사 1대
인터넷 라운지	30석	· PC 30대 · 복합기 1대 · 벽걸이형TV 1대 등	안내 1대
세미나실	50석	· PC 31대 · 빔프로젝터 1세트 · A/V장비 등	진행자 1대
사무실	3석	· PC 3대 · 복합기 1대 · 복사기 1대 · 서버 1대 등	-

2002년부터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현지 운영요원 초청연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가 간 정보격차해소 협력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3년에는 루마니아, 베트남, 이집트, 2004년에는 필리핀, 불가리아, 2005년에는 라오스, 튀니지, 2006년에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42)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정보격차해소에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서 세계 제14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선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게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함께 미래 IT 수출의 전략적 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20면.

43)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23면.

### 36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2007년에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케냐, 2008년에는 과테말라, 모잠비크,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등 현재까지 총 18개국에 18개의 정보 접근센터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기존 정보접근센터에 대한 유지·보수도 실시하고 있다<sup>44)</sup>.

<표 35>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유지·보수 현황<sup>45)</sup>

구축국가	구축지역	구축기관	개소일	유지·보수 및 재개소
캄보디아	프놈펜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	2002.11.25	2006.11.20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립 경제대학	2003.10.16	2007.07.10
베트남	하노이	우전통신 교육훈련센터	2003.11.05	2007.11.30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 여성개발연합	2004.03.03	2007.05.06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무역훈련센터	2004.10.15	2008.07.15
불가리아	소피아	소피아 국립철도청 사무소	2004.12.20	2008.10.17
라오스	비엔티안	라오스 직업훈련원	2005.05.27	
튀니지	튀니스	튀니스 과학단지	2005.11.1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우정국	2006.07.04	
나이지리아	아부자	나이지리아 기업기술센터	2006.11.14	
몽골	울란바타르	울란바타르 대학	2007.06.15	
우즈베크	타슈켄트	타슈켄트 정보통신대학	2007.10.25	
케냐	나이로비	케냐 통신기술대학	2007.11.09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산카를로스 대학	2008.06.19	
모잠비크	마푸토	기술개발센터	2008.09.23	
스리랑카	콜롬보	국립경영교육원	2008.12.15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바쿠대학교	2008.12.17	
방글라데시	다카	방글라데시 공대	2008.12.17	

44)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21면.

45)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21면.

## 2. 해외 정보통신기기 지원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 해외주재 한국인 학교 그리고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기기 지원 신청을 접수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1998년 중국과 러시아에 185대를 시작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에는 총 23개국에 3,401대의 중고PC가 보급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20,110대를 지원하였다<sup>46)</sup>.

<표 36> 권역별 중고PC 해외보급 실적<sup>47)</sup>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아시아	109	0	0	20	230	952	1,355	1,802	2,547	2,826	1,251	11,110
CIS	76	0	0	40	200	1,004	397	353	770	770	419	4,029
중남미	0	0	0	0	0	0	265	1,280	0	0	600	2,145
유럽	0	0	0	0	0	105	0	0	0	30	301	436
아프리카	0	0	0	0	0	100	0	100	520	840	830	2,390
계	185	0	0	60	430	2,161	3,553	3,553	3,837	4,466	3,401	20,110

46)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24~325면.

47)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25면.

### 3. 해외 IT 전문인력 양성

해외 IT 전문인력 양성 사업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해외정보화전문가 초청연수 사업을 1998년부터 개발도상국 및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분야의 정책 결정자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전자정부 등 정보화 모델을 전수·홍보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113개국 총 2,809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sup>48)</sup>.

<표 37> 연도별 IT 전문가 초청연수 추진실적<sup>49)</sup>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교육생 수	93	158	168	266	207	345	318	286	261	292	415	2,809
국가 수	29	34	32	36	46	49	57	59	68	68	74	113

또한 IT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지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48)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26면.

49)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26면.

<표 38>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sup>50)</sup>

과정명	교육만족도 (강사평가평균)	Overall 평가평균	과정만족도
아시아 국가 정보화 과정	6.34	6.60	6.53
중남미 국가 정보화 과정	6.28	6.65	6.62
동유럽 국가 정보화 과정	6.68	6.76	6.75
중앙아시아 국가 정보화 과정	6.03	6.39	6.33
통신 인프라 과정	6.38	6.74	6.73
정보보호 과정	6.45	6.77	6.65
전자정부 1차 과정	6.13	6.01	5.56
국가 정보화 과정	6.30	6.47	6.44
전파방송관리 과정	6.38	6.34	6.17
전자정부 2차 과정	5.92	6.44	6.23
AfDB 정보보호 과정	6.20	6.42	6.14
AfDB 이동통신 과정	6.25	6.30	6.17
ADB 벽촌정보화 과정	6.66	6.22	5.92
APT 이동통신 과정	6.20	6.37	6.18
APT 통신규제 과정	6.22	6.69	6.71
평균	6.29	6.48	6.34

※7점 likert 척도 사용

<표 39> 교육을 통한 한국에 대한 태도변화<sup>51)</sup>

과정명	한국 IT 능력 인지도		한국 IT산업 인지도		교육 후 한국 이미지 인지도
	교육 전	교육 후	교육 전	교육 후	
인지도	3.85	6.24	4.17	5.95	5.92

※7점 likert 척도 사용

50)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31면.

51)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31면.

#### 4. 해외 정보화 봉사단 파견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파견하는 해외 정보화 봉사단에는 우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시행하는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약 1개월 파견), 한민족정보화지원단(약 3개월 파견), 한국유엔IT봉사단(약 3개월 파견)과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약 2년 파견)이 있다. 이 중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은 건축, 의료, 농업, 한국어 등 다양한 분야를 파견하고 있으며, 최근 IT분야의 파견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 중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의 경우 해당 국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IT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간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고 IT KOREA의 홍보기능을 하고 있다.

<표 40>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현황(2001~2008)<sup>52)</sup>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해외 인터넷 청년봉 사단 파견 사업	파견 국가	21국	27국	42국	32국	33국	29국	36국	41국	66국
	파견 팀	61팀	47팀	87팀	75팀	86팀	80팀	87팀	117팀	640팀
	파견 인원	175명	206명	345명	300명	320명	304명	323명	442명	2,415명

52)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38면.

## 5. 개도국에 대한 IT 컨설팅

정부는 개도국에 대하여 IT강국으로서의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및 관련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개도국에 대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수립 등 다양한 IT관련 자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up>53)</sup>.

우선 개도국 정보통신 자문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자정부 전략 및 사업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업이다.

<표 41> 2008년도 개도국 전자정부 컨설팅사업 주요 활동내역

지원 국가	수행 기간	주요 활동 내용
에티오피아	2008. 4~12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실행계획수립
나이지리아	2008. 4~12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 기술 검토 및 자문
베트남	2008. 5~12	ICT 표준목록 기술 검토 및 자문 실시

※자료: 세계은행 협력사업 최종결과보고서(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

53)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340면.

42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표 42> 2008년도 개도국 국가정보화 컨설팅사업 주요 활동 내역

지원 국가	수행 기간	주요 활동 내용
UAE	2008. 2	국가정보화 지원 사업 타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
아자르바이잔	2008. 7	전자정부 전략 수립 TOR 검토
우간다	2008. 7	중앙은행 정보화 계획 기술 검토
카자흐스탄	2008. 8	전자세금정보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기술 검토
베트남	2008. 8	국가정보화 지원 사업 타당성 분석
쿠웨이트	2008. 11	국가정보화 컨설팅 지원 사업 타당성 분석

※자료: 세계은행 협력사업 최종결과보고서(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

<표 43> 개도국 방송통신 자문사업 주요실적 요약

년도	수원국	자문 분야		
2008	라오스	상호접속정책 자문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통신정책 자문	공동 번영을 위한 개도국 정보통신 협력사업 (2007~08)
	카자흐스탄	전파관리정책 자문		
	남아공	통신시장 경쟁정책 자문		
	캄보디아	통신 인프라 구축정책 전문가 파견	IT 전문가 파견	
	이디오피아	정보화 전략 및 전자정부 정책 전문가 파견		
2009	베트남	정보보호 정책 자문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 자문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 (2009~)
	페루	신규 서비스 도입 정책 자문		
	이집트	자문분야 관련 협의중(AIDB 협의 진행)		
	필리핀	자문분야 협의중(파견 전문가 모집 중)	IT 전문가 파견	
	콜롬비아	자문분야 협의중(파견 전문가 모집 중)		

※자료: 개도국 방송통신정책자문사업 결과보고서(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9)

다음으로 제5차 아세안 정상회의(2001.11)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2002년부터 추진된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이 있다. 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개도국의 방송통신 정책 자문단을 해당 국가에 파견하

고 정책 자문을 하였다.

2008년 2월부터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자정부 마스터 플랜 구축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개도국의 전자정부 계획수립 및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의 개도국이 정보화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지원 사업이다.

## 제3장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세부적 보완

이 장에서는 제2장 기존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취약계층을 재설정하고, 세부적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절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지향

#### 1. 이용자 중심의 실용정책

국가정보화의 하나로서 공급자인 국가 주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용자를 중심에 놓고 이용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궁극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보급, 정보통신기기 보급의 인프라 보급 중심의 정책에서, 이러한 인프라 보급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실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 경제적·정신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2.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한 지난 수 년 간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이라는 이른바 4대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선정하여, 이러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에 정책역량을 집

중하여 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4대 계층 중에서도 최근 정보접근 및 활용이 급격히 취약해지고 있는 계층을 선별하고 세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최근 주목되는 현실은 농어민 및 장노년층의 정보격차가 상대적으로 좁아지지 않고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같이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3. 정보복지의 실현

정보소외계층의 권리를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정책을 탈피하여, 실질적 의미의 정보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절감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은 문화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차원의 생존권의 문제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다. 따라서 복지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정책담당자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정보복지를 실현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 4. 정부-민간 협력체제의 거버넌스 구축

위와 같은 정보격차해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정부-민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사회의 발전수준 및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숙으로,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대부분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영역의 주도자인 정부, 사회영역의 주도자인 개별 국민,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기존의 정보격차해소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인력부족, 재정적 한계, 조직의 비탄력성, 전문성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sup>54)</sup>

기업 입장에서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과거 시혜적 차원이나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의 수행으로 사회구성원의 신뢰를 얻고 참여임직원의 자긍심과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sup>55)</sup>

예를 들어, KT에서는 ‘대학생 농촌 IT 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매년 농어촌지역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삼성SDS는 외국의 소외지역에 컴퓨터를 기증하는 ‘SDS사랑의 IT 교실’을 운영하여, 국제 정보격차해소에 노력하고 있다.<sup>56)</sup>

따라서 정보격차해소 영역에 있어서도 정부-민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바람직한 정부-민간의 거버넌스를 정립한 이후, 법률개정을 통하여 이를 법에 반영하고, 이러한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54) 이종순, 정보격차를 넘어 평등사회로-농촌과 도시 간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195쪽.

5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앞의 책, 305쪽.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정부-민간 협력체제 구축으로 이해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작성된 보고서로는 예를 들어, 최숙희, 정보격차해소와 민간협력, ISSUE REPORT 05-1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참고. 우리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정부-민간 협력체제 구축의 중심은 거버넌스의 구축 및 그에 따른 입법, 그 집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정부-민간 협력체제 구축의 일부분일 뿐이다.

56) 그 밖에 기업의 정보격차해소 노력에 관해서는 최숙희, 앞의 보고서, 25-28쪽;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백서, 310-313쪽 참고.

## 제2절 취약계층의 새로운 Target positioning

### 1. 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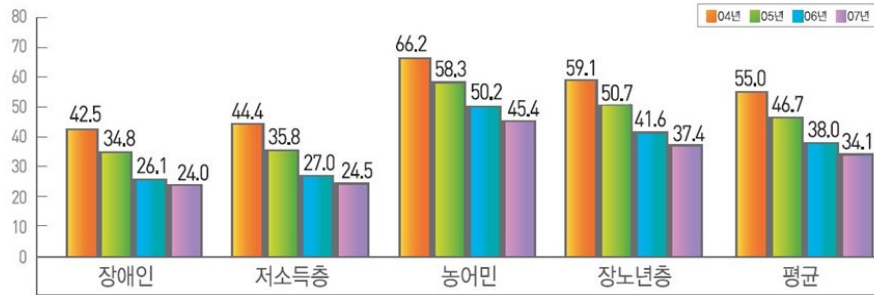
지난 수년간 정보격차해소정책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이라는 이른바 4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4대 계층 중에서도 최근 정보접근 및 활용이 급격히 취약해지고 있는 계층을 선별하고 세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최근 주목되는 현실은 농어민 및 장노년층의 정보격차가 상대적으로 좁아지지 않고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같이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2. 농어민/노장년층의 격차해소 미흡 및 이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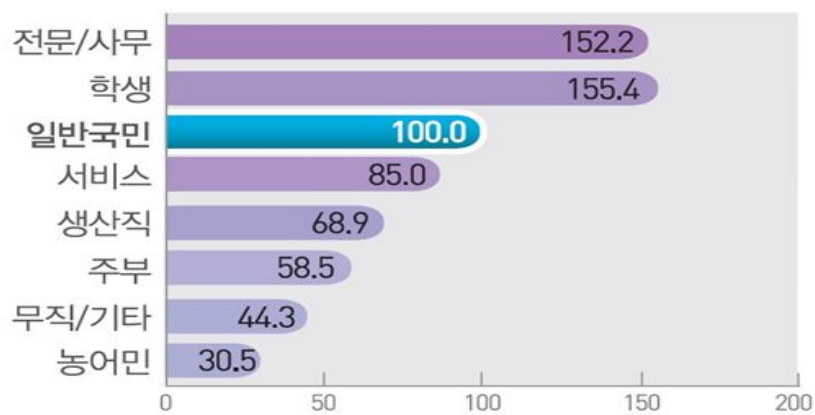
#### (1) 문제상황

정부는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이라는 이른바 4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에 역량을 집중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07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 간의 정보격차지수는 접근, 역량, 활용 등 모든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8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그림 8> 취약계층간 부문별 정보격차 지수<sup>57)</sup>



<그림 9> 직업별 정보역량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의 정보격차 지수는 2007년 기준 45.4로,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의 정보격차 지수는 2007년 기준 37.4로 상대적으로 정보격차 지수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어민의 경우, 접근, 역량, 양적 활용, 질적 활용 등 4대 영역에서, 접근은 23.3으로 비교적 양호한 반면에, 역량이 69.5, 양

5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백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적 활용이 57.6, 질적 활용이 68.0으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민계층의 정보화수준이 낮은 이유는 타 취약계층에 비하여 교육 수준과 정보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지역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군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8)</sup>

반면 50대 이상의 장노년층도 접근, 역량, 양적 활용, 질적 활용 등 4대 영역에서, 접근은 17.1로 비교적 양호한 반면에, 역량이 66.3, 양적 활용이 55.6, 질적 활용이 59.4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농어민계층의 정보격차해소정책

정부는 농어촌과 도시의 정보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을 독려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 어업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량적, 정성적 방법에 의한 조사 결과를 보면, 농어촌과 도시의 정보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농어촌지역에도 정보통신망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새로운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 무선 네트워크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농어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이용격차를 획기적으

58)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233쪽.

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민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 정보화를 소득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농어민 설문조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였을 때 소득증가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도시민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보면, 정보화를 소득증가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연계하는 정책의 시행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59)60)</sup>

셋째, 이와 관련하여 영농 및 어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콘텐츠란 각종의 정보 및 정보의 구성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이 영농 및 어업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일 것이다. 현재는 게임이나 다른 영역의 콘텐츠와 비교하여 볼 때 영농 및 어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 생산, 출하, 판매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sup>61)</sup>

넷째, 농수산물 전자상거래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단순히 정보격차의 해소가 아닌 농어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나아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농수

59) 이종순, 정보격차를 넘어 평등사회로-농촌과 도시 간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iv면.

60) 이상 이종순, 앞의 책, 129쪽, 168쪽 이하 참고.

61) 이종순, 앞의 책, 192-193쪽.

산물의 전자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농수산물의 규격화,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농수산물은 공산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격화, 표준화가 취약하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농수산물의 규격화, 표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농수산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농수산물은 공산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통조건이 열악하다. 쉽게 변질될 소지가 있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물류시스템을 농수산물의 유통에 부합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홈페이지를 모아서 상위포털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앞으로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sup>62)</sup>

### (3) 장노년층의 정보격차해소정책

정부는 일찍이 장노년층의 정보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노년의 정보화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어르신정보화제전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어르신 IT 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sup>63)</sup>

유럽연합(EU)은 고령화의 진전이 유럽의 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 아래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는 많은 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특히 유럽연합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이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통한 정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장과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고령층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장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연합은 회원국에서

62) 이상, 이종순, 앞의 책, 193-194쪽.

63)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앞의 책, 115-118쪽.

장노년층의 정보화를 저해하는 기술적·법제도적 문제점을 조사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2007년 6월 ‘정보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유럽실천계획(European Action Plan for Ageing Well in the Information Society)’를 채택하였다. 이 계획은 직장과 지역사회, 가정에서 장노년층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유럽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능형 가정(smart home), 독거생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연구와 혁신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연합, 각 회원국, 민간부문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1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sup>64)</sup>

민간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은 정부의 노력보다, 시민단체성격의 비영리단체의 노력이 돋보인다. 시니어넷(SeniorNet)이라는 50대 이상의 정보화 교육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며, 개인이나 기업의 재정지원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이 단체는 현재 미국 전역에 200개 이상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각 지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는 장노년층의 정보화를 위하여 정보화 교실(Computer Class)를 운영하여 장노년층의 정보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sup>65)</sup>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층 정보화교육을 시작으로 이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2007년 현재 전국에 217개의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IT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실버넷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장노년층 정

64) 이상 김정언 외, 고령화와 정보격차:정보격차의 결정요인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66-67쪽.

65) 김정언 외, 앞의 책, 63쪽.

보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sup>66)</sup>

장노년층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세부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 인지능력이나 조작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장노년층이 정보통신기기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편적 디자인을 채택하여 보급하고,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구동 소프트웨어를 단순화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장노년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 금융, 의료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통로를 단순화하여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각종 콘텐츠의 구현시 글자크기나 정보제공방식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야 한다.<sup>67)</sup> 다섯째, 이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에서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의 구현은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므로, 표준화 및 지침 마련 등의 환경조성 정책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3. 다문화가정

#### (1) 다문화가정의 의의 및 특징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 중 문화적 환경이 다른 개인이 한 가족이 되어 생활하는 이른바 ‘다문화가정’<sup>68)</sup>이 과거

66)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김정언 외, 앞의 책, 82-85쪽.

67) 이상 김정언 외, 앞의 책, 87-88쪽.

68) 다문화가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혼혈인 가족, 국제결혼가족, 결혼이민자가족, 이주민가족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용어는 대상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주민가족 관련 법안 검토자료, 2007.4.16. 고경화의원실 내부자료, 안지현, 한구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의 배치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91쪽에서

에 비하여 현저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은 언어를 비롯하여 사고 방식, 관습 등 문화적 환경이 달라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특징은 대부분이 농어민이나 도시 저소득 남성 근로자와 저개발국가 출신 여성 배우자의 결합이라는데 있다. 이른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여도,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사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신체적 특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반적으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능력으로 자신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겪고 비행으로 치닫기도 한다.

## (2) 다문화가정의 정보격차와 그에 대한 대응

이러한 다문화가정은 정보격차해소정책 관점에서 파악하면, 복합적 취약요인으로 인하여 정보격차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기기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전라남도와 KT전남본부는 다문화가정의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 및 문화교류로 이주여성의 우리문화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MOU 체결로 포스코(대표이사 윤석만)는 다문화가정 434가정에 PC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나아가 전남도의 다문화가정 인터

넷사용요금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남도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PC 보급 및 대상가정 조사 및 선정 등을, KT 전남본부는 다문화가정 인터넷 서비스 및 보급 PC 설치, IT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전남도 다문화가정 초고속 인터넷 구축사업 및 지속 지원 연계 사업과 다문화가정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반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협력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sup>69)</sup>

둘째, 정보이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9개월간 정보격차 해소 위하여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단일과 종합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단일프로그램은 한국어 이해 및 사용능력 향상, 기초 정보화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기본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종합프로그램은 한국어 활용 중급 이상 및 결혼이민자의 종합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sup>70)</sup>

셋째, 이러한 개별적 차원의 노력 외에도,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 및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69) 2008년 9월 30일 연합뉴스 참고.

70) 이상 2009년 3월 26일 연합뉴스 참고.

### 제3절 새로운 정보환경 및 그에 대한 대응

#### 1.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 (1) 디지털 방송 환경으로의 변화

정부는 오는 2013년부터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지난 2008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sup>71)</sup>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시청자들에게 좀 더 선명한 화질과 좋은 음질을 제공할 수 있고, 일정한 대역폭에서 좀 더 많은 채널과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지상파방송을 송출하는데 아날로그에 비해서 더 넓은 구역에 송출할 수 있어 난시청 지역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다.<sup>72)</sup>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i) 방송 신호를 디지털화 신호로 바꿔주는 수신장비인 디지털 컨버터를 구입하여 아날로그 TV에 연결하거나, (ii) 디지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TV를 구입하거나, (iii) 케이블 TV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계속 TV를 시청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의 반대편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상승할 수 있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이미 지난 6월 12일 세계 최초로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을 시행한 미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71) 법률 제9077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

72) 강상현 외, 디지털방송법제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4쪽 참고.

## (2) 미국의 경험

여기서 디지털 방송에 관한 미국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고, 이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의 최진봉 교수의 전언을 들어보자.<sup>73)</sup>

지난 6월 12일 미국은 세계 최초로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약 10년에 걸쳐 준비하고, 2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진행된 미국의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은 전환 시기를 한 차례 연기하는 시행착오까지 거치면서 행하여졌다. 미국은 원래 2월 17일부터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미흡한 준비를 이유로 의회가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입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결국 6월 12일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미국 시간으로 12일 자정을 기해 약 1800여 개에 이르는 미국의 모든 TV 방송사들은 그동안 사용하던 전파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날로그 TV를 통해 TV 프로그램을 시청해 왔던 시청자들은 방송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수신장비인 디지털 컨버터를 구입하든지, 디지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TV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케이블 TV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기존의 아날로그 TV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년 전부터 디지털 컨버터를 구입할 수 있는 40달러 상당의 쿠폰을 신청을 받아 무료로 신청자들에게 지급해 왔다. 하지만 신청자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 쿠폰 지급을 위해 마련한 재원이 바닥이 나면

73) 이상 최진봉(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의 프레시안의 기사.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621132324&section=06](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621132324&section=06)  
 당해 기사를 전제하지 않고, 이 보고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약간 변형하였다.

서 미국 정부는 컨버터 구입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함께 디지털 TV에 대한 보다 자세한 홍보 부족으로 많은 미국 가정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시청률 조사회사인 미국 닐슨사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TV 수상기를 보유한 1억 1400만 가구중 약 2.2%인 250만 가구가 아직까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방송인들의 연합체인 미국방송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의 조사에서도 미국의 약 200만 가구 정도가 디지털 TV 전환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더욱이 디지털 TV 전환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가구들이 저소득층이나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미국내 소수 민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사회적 소외 계층이 디지털 TV 전환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내 인종별 디지털 TV 전환 실태에 대한 닐슨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전체 가구 중 백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로 가장 낮은 반면, 흑인 가구는 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히스패닉 가구가 3.6%, 그리고 아시아 가구는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백인 가구에 비해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미국내 소수 인종 가구들의 디지털 TV 전환 무방비 상태가 두 배에서 세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결국 미국 정부가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TV 전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sup>74)</sup>

74) 그 밖에 미국 정부는 디지털 TV전환을 추진하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에도 소홀해 TV 시청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미국 정부가 TV 전송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했던 6월 12일 하루 동안 디지털 TV 전환 업무를 주관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약 70만 통 이상 걸려왔다. 특히, 시카고, 뉴욕, 필라델피아, 델리스 등 대도시에서는 몇몇 TV 채널들이 디지털 TV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UHF 신호를 VHF

### (3)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보격차해소정책

우리나라도 오는 2013년부터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약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약 10여 년을 준비하고 시작한 미국의 디지털 방송 전환이 여전히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현실에 비추어 그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sup>75)</sup>

TV 시청이 가장 기초적인 정보습득의 창구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디지털 TV 환경에서 취약계층의 소외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포착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도 전체가구의 30%는 디지털 TV수상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6)</sup> 그리고 고가의 디지털 TV수상기 비용이나 케이블 TV 수신료 등의 증가를 고려하면 전통적인 취약계층은 이러한 디지털 방송 환경 변화에서 소외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방송 신호를 디지털화 신호로 바꿔주는 수신장비인 디지털 컨버터를 구입하는데, 정부가

---

신호로 바꾸었기 때문에 UHF 신호용 안테나를 구입한 시청자들이 VHF로 신호를 바꾼 채널을 시청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시민들은 디지털 TV 전환에 대비해 디지털 컨버터와 안테나를 구입하였음에도 일부 방송 채널을 시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고, 국민들은 UHF와 VHF 겸용 안테나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상의 논의도 최진봉 교수의 프레시안 기사 참고.

75) 이상 최진봉(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의 프레시안의 기사.

76) 정군기,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정보격차해소 방안 26~27쪽, KADO이슈리포트08-02호(통권 52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미국도 디지털 컨버터를 구입할 수 있는 40달러 상당의 쿠폰을 신청을 받아 무료로 신청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 그 범위를 미국과 같이 TV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국민에게 지원할 것인지, 또는 정보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그 지원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정책 내용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정보취약계층의 방송시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내용의 정책은 위헌적일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상회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가 국민 모두가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에게만 디지털 컨버터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더라도 최소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포함한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소요비용에 대한 재원의 조달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미국 디지털 방송 전환과정에서 핵심적인 재원조달 방법으로 부각된 700MHz 유희주파수 경매방안에서부터, 영국이 채택한 바 있는 TV 수신료 인상방안, 일본 총무성이 채택한 바 있는 국채발행 방안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론되고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 단순히 재원조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신·방송 산업 전반의 핵심적 이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한다.<sup>77)</sup>

한편 공공서비스 방송의 의무 재송신과 관련한 문제도 정보격차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상파 중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되어 있는 채널은 KBS1과 EBS에 국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77) 이상 2008년 7월 17일 입력, 디지털타임스, 최경섭 기자의 기사 중에서 인용.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71802010151693002](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71802010151693002) 참고

KBS2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이상, 이를 배제할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이 유력하다.<sup>78)</sup> 그 밖에 지역방송에 대한 의무재송신과 관련된 쟁점 등이 정보격차의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른바 방송법영역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적용과 관련하여 큰 시각차이를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세부쟁점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

### (1)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대응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이 연결되고,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Cyberspace)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 양 공간은 즉각적으로 상호작용을 주고 받으며 인간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개념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마크 와이저(Mark Weiser)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기존의 인터넷 웹 컴퓨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와는 명백히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sup>79)</sup> 이제까지의 정보화가 물리공간(physical space)을 사이버공간(cyber space)에 구현(virtualization)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유비쿼터스 정보

78) 강상현 외, 앞의 책, 3243-344쪽.

79) Mark Weiser, The Computer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cientific American 94-10, 1991.

화는 사이버공간을 물리공간에 구현(realization)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80)</sup> 이를 위해서 물리 공간과 사이버공간은 하나의 공간과 같이 이음새없는(seamless) 실시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리공간의 올리기(upload)와 사이버공간의 내려받기(download)가 인간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리공간의 올리는 물리적 환경 및 사물에 센싱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컴퓨터가 내재(embedded)됨으로써 구현될 수 있으며, 전자공간의 내려받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동작 가능한 구동체(actuator)를 물리적 환경 및 사물에 내장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정보통신망과 시스템, 그 안의 정보는 단순히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환경의 도래는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따르는 역기능도 예견된다. 특히 인간의 모든 생활이 정보통신망과 시스템, 그 안의 정보에 의존하여 영위되므로, 이러한 환경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존확률이 낮아진다.<sup>81)</sup> 따라서 무선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핸드헬드 단말기를 보유하는 것과 같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82)</sup>

이러한 측면에서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구

80) 마크 와이저는 이를 ‘다시 현실공간으로(back to the real world)’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81) 최남희, “u-도시 패러다임의 구상과 도시공간의 재창조 : 유비쿼터스 도시의 개발 모델 정립”,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5권 제1호, 66쪽 참고.

8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앞의 책, 9쪽.

현에 핵심적인 전제이다. 정부나 민간기업이나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의 품질을 향상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2)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접근성 향상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이용되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현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보다 지능형이므로,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이미 설명한 것처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이러한 환경에 편입되는 것은 문화적 삶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므로, 누구나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를 모두 시장에 맡기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술발전을 연구하고 지원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가의 보조기기가 아니면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이를 보조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sup>83)</sup>

## 제4절 소결

제3장에서는 제2장 기존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실용정책,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정보복지의 실현, 정부-민간 협력이라는 4대 정책을 제시하고, 새로

8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앞의 책, 11쪽 참고.

운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농어민층 및 장노년층과 다문화가정을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재설정하고, 디지털 TV와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 대응한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세부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부적 보완책은 기존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정보복지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부적 보완책은 나중에 서술하는 것처럼 정보격차라는 개념의 내재적 한계와 이념적 한계로 인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격차를 해소하거나 정보기회의 확대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전 국민의 정보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정보향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다. 이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 제4장 정보격차해소의 법이론적 과제

### 제1절 새로운 지향점의 도입

#### 1. 격차개념의 협소성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여기에서 "격차"(divide)라는 개념은 두 비교대상의 차이가 벌어져 다른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격차해소"는 결국 앞서가는 대상의 발전속도를 늦춰서 뒤따라가는 대상과 다른 정도를 같게 하는 것이든 혹은 뒤쳐진 대상의 수준을 높여 앞서가는 대상과 같게 하는 것이든 양자 간의 다른 정도를 같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다른 정도를 같게 만드는 소극적인 대응에 지향의 핵심이 존재한다.

또한 "정보격차"는 주로 정보주체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보환경에 관한 것에 주목하여 왔다. 즉 정보주체의 내재적인 격차에 관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를 둘러싼 외적 시설의 격차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수동적 존재로 남게 되고, 어떻게 외적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정보주체와 분리되게 된다. 결국 정보주체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있어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정보격차를 위한 노력은 시혜적인 관점에서 접근된다.

"정보격차"는 정보"접근"의 차별성의 해소에 머무르게 되고, 정보주체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해소방안

은 종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극히 원초적인 문제이고, 정보주체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극히 협소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의 지향점이 정보접근에 애로가 있는 취약계층의 정보접근능력 확보에 있었던 것은 시대적인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격차해소의 문제가 제기된 것도 불과 10여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의 정보접근능력 확보 이상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 그 동안 정보접근이 외적인 환경에서든 내적인 역량에서든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에 집중하여 그들의 정보접근가능성을 높여서 정보에 원만하게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어느 정도 정보격차의 안정적 해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우선 정보접근이 원활한 계층과 정보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간격을 좁히는 소극적인 정책방향은 정보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직업활동까지 연결되므로, 단순히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국한된 정책만으로는 사회전반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의 틀이 아닌 취약계층을 망라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격차"라는 개념이 수명을 다한 점은 더 이상 정보접근환경을 개선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정보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정보화사회 초기에는 정보접근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네트워크가 사회 전반에 고루 분포되지 않았고, 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도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정보접근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격차해소"에 주요했으므로, 격차해소는 곧 정보접근환경 개선과 같은 맥락에 있게 된다. 그러나 정보접근에 필요한 환경이 사회 전반에 고루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격차해소만으로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정보접근환경의 개선을 넘어서 정보활용능력의 확대로 발전되어야 하므로 "격차해소"의 개념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발전된 이론적 체계화가 시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 2. 정보격차의 안정적 해소

좁은 의미에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적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우선 정보격차가 처음 문제로 제기되던 시점의 정보접근 취약계층 중의 하나로 주부 등의 특수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과거 정보격차해소법에서도 제11조 제2항에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들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대상으로 제4호에서 "여성 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전업주부", "모·부자복지법 제19조 1항에서도 모·부자복지시설 등 여성관련 복지시설의 수용자 또는 이용자"를 그 대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정보격차해소백서에 이르면 전체 여성의 성별 정보역량수준은 89.7로서 남성의

110.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직업으로서 주부의 직업별 정보 역량수준도 58.5로서 무직(44.3)이나 농어민(38.5)에 비해서는 현격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직 68.9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sup>84)</sup> 이는 이미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과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낼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기 보다 남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등한 수준에 있으므로, 38대 이하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정보격차에 직업의 차이가 없으며 주부라고 할지라도 38대 이하에서는 타 직업군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이 더 이상 정보취약계층이 아님은 정보격차 해소백서에 여성과 관련한 분야를 정보이용능력 취약자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음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확실히 정보격차해소가 어느 정도 안정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접근 중심의 정보격차해소가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직접적으로 명확히 나타내주는 자료로서는 일반국민과 소외계층간 부문별 정보격차 지수에서 접근지수에 관한 한 2004년 일반국민과 36.3의 격차가 있었으나, 점차 격차가 축소되어 2005년 29.0, 2006년 19.8, 2007년 13.5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거의 접근부분에 한해서는 거의 사회 전 분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격차보다 오히려 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접근 중심의 정보격차는 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특히 가장 취약계층 중의 하나로 꼽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2007년 기준으로 11.2의 접근격차를 보일 뿐이므로 전체 평균이하의 격차를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또 장노년층의 접근 격차는 9.9의 수준이므로 거의 접근격차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격차해소의 노력의 결실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바, 일단 정보접근을 위한 격차해소에는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84) 2008 정보격차해소백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 중심의 정보격차해소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보역량과 활용에 관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04년 일반국민과 72.5의 격차가 있었고 점차 격차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2005년 65.8, 2006년 57.1, 2007년 55.5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장노년층의 접근격차가 거의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의 측면에서는 66.3의 격차로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접근 중심의 "격차"해소가 아닌 국민 전반의 정보수용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을 함께 견인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보격차해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단순한 접근격차해소는 이제 정책집행을 통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만족하지 말고, 다음 단계의 정보수용능력 그리고 정보활용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의 출발선상에 서있는 시점이다.

### 3. '정보격차'개념의 발전적 폐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격차"라는 개념의 시의적절성은 거의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보접근의 문제도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농어촌과 저소득층에서의 정보접근은 여전히 대도시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고,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기회가 없었고 젊은 시기에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은 노년층의 정보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격차의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미래지향적 개념으로서의 의미는 이제 상당부분 퇴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격차의 개념을 그대로 두고 정보수용, 정보활용을 포함한 정보생

활 전반의 향상을 포섭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격차라는 개념의 협소성과 접근중심의 체계화로서는 정보가 생활의 필수적 기반을 넘어 사회적 생존과 수익활동의 근원이 되는 점까지 포섭하기는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격차의 개념을 발전적으로 폐기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사건으로는 정보격차의 개념을 폐기하되 정보격차의 아직 미흡한 점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이론적인 과제라고 생각된다. 정보격차의 개념에 얽매어 뒤떨어진 영역이나 주체의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은 발전하는 사회에 부응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보격차를 포함하는 보다 발전되고 전향적인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격차의 개념을 발전적으로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격차의 개념을 폐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정보접근의 가능여부를 갖고 가능과 불가능의 이분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정도의 문제로 관점이 발전되게 된다. 또한 정보격차해소의 주체를 소수의 정보소외계층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살펴본다.

#### 4. 새로운 '정보생활'개념의 수립

정보화시대 도입기에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사회 특수한 소수 계층에 국한된 일이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는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1997년경에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에 초고속통신망의 보급은 물론이고 컴퓨터를 보유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았다. 설령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독립된 사무기기의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고, 전동타자기 잘해야 워드프로세서 정도의 기능을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세기 말에 이르러 초고속통신망이 깔리면서 비로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이 시작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보화시대 초기에는 오히려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소수 계층의 특수한 영역이었고 일반적인 대중으로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혹은 접근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하였다.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정보화의 물결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되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한 자들은 여전히 국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주로 학교교육을 통해 컴퓨터를 다룰 기회를 가진 세대나 혹은 호기심이나 사회적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류에 속하게 되었고, 지역적으로도 초고속통신망이 신속하게 보급된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장년층 이상의 고연령대나 농어촌 지역 또한 저학력층에서는 여전히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다만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취약계층 혹은 정보소외계층의 생존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은 아니었고, 다른 계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이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도의 호기심충족 혹은 새로운 문화경험에 이르는 차원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정보에 접근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생활과 직업활동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민의 경우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데에는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별도로 시간을 내서 컴퓨터 조작방법을 배우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서핑을 하느니 그 시간동안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저소득층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그것 말고도 당장 급한 지출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가로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정보에 접근하는 비용 대신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정보접근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을 목표로 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더 이상 특수계층에 국한되거나 혹은 단순한 호기심차원의 행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그 자체가 되었다. 거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전국에 초고속통신망이 보급되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에 무제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어 정보접근에 필요한 인프라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이건 농어민이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인프라는 집 앞 까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지 담장을 넘어 안방까지의 연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정보접근격차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 안방까지의 연결은 정보주체의 자유의지에 달린 결심의 문제이지, 정보접근 가능성이나 환경 그리고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에 접근할 의지가 아예 없는 계층에 대해서 까지 정보접근을 강요할 필요는 없으며, 마치 말을 물가로 끌어다 놓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억지로 말에게 물을 먹일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정보격차의 시대는 사실상 마감하였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패턴이 되는 것으로 전제하는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일상생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으므로,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취약계층에 국한된 정보격차나 정보기회라는 개념은 폐기되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에 관점을 맞춘 진부한 개념으로는 모든 국민을 포괄할 수 없다. 또한 정보는 정보사회의 생존기반이므로 그것은 접근의 향유나 기회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그 자체가 된다. 즉 모든 국민의 특별할 것 없는 일상생활이 되는 정보의 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한차원 높은 개념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한적 의미를 갖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나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가 아닌 포괄적인 "정보생활(digital life)"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5. '정보향유권'의 지향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격차를 해소하거나 혹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전 국민의 정보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의 패러다임이라고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정보생활의 확보 대상은 사회의 제한적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정보접근권의 주체가 정보취약계층이나 정보소외계층으로 국한되어 좁게 설정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보생활"의 확보라는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정보접근권이 아니라 한단계 높은 '정보향유권'이자 '정보인권'의 주체로 설정될 수

있게 된다.

정보사회는 정보와 네트워크가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정보를 향유하는 권리는 사회 특정계층에 국한되어 인정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차원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바로 이 정보향유권 또는 정보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정보격차해소가 중요한 문제이던 시점에서는 정보접근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권적 복지와 시혜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가 모든 사람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발전함에 따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권적 복지와 시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정보향유권이나 정보인권이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 정치적 참여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된다. 인터넷 공간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타인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 공감 또는 반박을 전개하고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카페와 같은 온라인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활성화된다. 정보생활에는 이러한 정치적 활동을 당연히 포함하여야 하고, 정보접근능력이나 정보수용능력이 결여된다면 참정권의 행사는 오프라인에 국한되어 그 범위가 극도로 축소된다. 결국 정보사회의 정보능력은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정보격차"와 "정보기회"를 지양하고 "정보생활"의 새로운 개념이 수립되는 것과 논리적인 궤를 같이 하여 특수한 계층을 상대로 한 "정보접근권"이라는 사회권적 복지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

는 "정보향유권" 또는 "정보인권"이라는 본질적인 기본권을 지향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제2절 정보향유권의 법적 가치

모든 국민의 정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대적 기본권으로서 정보향유권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비로소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최종적인 목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정보향유권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수단

먼저 정보향유권은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1문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적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며, 단지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0조 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뒤이어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보인권에 대한 주장이 산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정보인권을 구성하는 권리로서 정보접근권, 정보자기결정권(정보자기접근권, 정

보자기열람권, 정보자기정정권, 정보자기삭제권), 정보통신의 자유, 정보 재산권, 정보보안권, 정보공유권 등을 열거하였다.<sup>85)</sup> 즉 근대 국가에서 자유권은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였으나, 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소극적인 자유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적극적인 자유권이 요구되며, 특히 정보사회의 활력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활용에서 나오므로 각 개인은 정보기제를 숙지하고 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그러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정보인권이라 부르는 견해<sup>86)</sup>가 주장된 바 있다. 이러한 정보인권은 정보접근권의 차원에서의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현재와 같은 정보향유권의 단초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음은 정보인권의 구체적인 나열에서 정보향유권과 같은 포괄적인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인권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아닌 정보향유권이라는 기본권이 정보사회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실현수단으로서 구체적인 헌법적 권리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을 헌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 기본권성을 명백히 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화는 해석과 이론에 일임하는 것이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장기적 방안"이라는 과거 연구<sup>87)</sup>의 연장선상에서 이론적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85) 오병철 외, "효율적 정보격차해소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05-1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12.

86) 장영민, "정보사회의 법의 변용",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376-377면.

87) 오병철 외, 앞의 책, 12면.

## 2. 정보사회의 행복추구권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으며,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명확히 행복추구권을 밝히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광의와 협의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모든 기본적 인권을 포괄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생명·자유·생존 등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개념으로 넓게 파악할 수도 있는 반면, 인격적 생존에 불가결한 인격권으로서 좁게 이해할 수도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인격의 형성·유지·표현의 전제가 되는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sup>88)</sup>고 판시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sup>89)</sup>

정보향유권을 행복추구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논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정보접근권에 대해서는 행복추구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정보사회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소유하느냐가 생존의 조건이 되는 사회이며 정보접근과 활용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회이므로, 정보에 접속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하기 위한 필수적 능력’

88)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 헌가 14.

89) 헌법재판소 2004. 4. 20 선고, 2002 헌바 47.

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되며,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에의 접근과 활용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았다.<sup>90)</sup>

생각해보건대, 좁은 의미의 정보접근권은 정보취약계층을 상대로 정보에 접근하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므로 어떠한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내용의 생존권에 더 가까운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권도 현대적인 의미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정보향유권은 정보취약계층만을 상대로 하는 시혜적인 것인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접근을 넘어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더더욱 행복추구권으로서의 본질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이 정보를 향유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소극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또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향유권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정보사회에서의 구체적 발현이라고 볼 것이다.

### 3. 정보향유의 평등권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평등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그 핵으로 하는 기본권의 실효성과 그 동화적 통합효과를 촉진시켜주는 수단인 것이다.<sup>91)</sup> 평등권은 모든 국민에게 여러 생활영역에

90) 오병철 외, 앞의 책, 20면.

9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321면.

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와 같이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통합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케 하여 사회전체의 통합과 조화를 실현케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상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기회균등'이므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균등하게 갖는 동시에 정보활용을 할 능력을 균등하게 확보하는 정보향유권이야말로 정보사회의 평등권의 핵심적인 실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평등권의 세부적인 종류 중 하나인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헌법 제31조 1항에서의 교육에는 평생교육도 포함되는 것이고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향유를 위한 교육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정보향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국가는 정보의 접근과 활용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 책무를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sup>92)</sup>

#### 4. 인간다운 정보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각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92) 오병철외, 앞의 책, 25-26면.

말한다.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이른바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된 선진각국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찍부터 규정하고 있어서, 19세기Weimar헌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1항에서도 "적절한 생활조건을 가질 권리"로 천명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완벽하게 실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론 이론적으로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은 단순한 입법방침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확립되어 있었으나 법현실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 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sup>93)</sup>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발생됨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다만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무제한으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시대상황에 따라 제정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급부청구가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헌법적 이론을 정보향유권에 적용하여 보면, 정보향유권이야

93)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 헌가 10.

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현대적 일 유형으로 파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즉 정보를 향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것을 충족시켜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는 이미 과거의 정보격차해소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는 정보격차해소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환경을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해소의 단계에서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급부의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처럼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보생활이 정보사회에서 필수적인 환경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향유는 결코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서 한 단계 더 높은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는 물질만이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급부의 요청이 되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향유도 생활유지에 불가결한 급부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보향유권도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급부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제3절 정보수용주체 측면의 정보능력

#### 1. 정보능력의 단계적 구분

정보취약계층이나 정보소외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보격차의 개념에서는 정보접근환경에 중심이 있었다. 즉 정보주체가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환경이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정보주체가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보다는 정보주체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정보 접근권을 사회 특정계층에 국한된 협소한 의미로 본다면 그러한 정보환경에 중심을 둔 접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에 기반을 둔 환경개선의 노력도 폄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현재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 국민의 정보생활에 있어서 정보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정보능력이다. 인간은 생래적으로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정보능력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구체적인 능력의 우월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정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국가는 오로지 국민 각자가 갖는 잠재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만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 각 개인의 정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정보향유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외부 환경과 내적인 역량 두 가지 모두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보향유를 위한 외부 환경에 중점이 두어졌으나 이제는 정보주체의 내적인 역량 계발도 병행해서 정책적인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의 정보능력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보주체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적 환경이 중요한 정보접근능력이다. 둘째로는 정보주체가 정보에 접근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정보수용능력이다. 끝으로 정보주체가 정보를 수용하여 그것을 다시 유용

하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국민이 정보활용능력을 갖추는 것이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는 개인이 직면해 있는 단계에 맞춰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다음 단계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 2. 제1단계 - 정보접근능력

정보향유권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은 다시 정보환경의 조성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다.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 기기를 보급하고 초고속통신망과 같은 인터넷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외적인 환경이라면 내적으로는 또한 국민 모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초적인 조작능력을 보유하도록 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접근능력은 정보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이 되는 능력이므로 그 중요성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은 이 정보접근능력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여 왔다.

다만 현재까지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정보접근능력의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므로 정보격차해소의 주된 대상이 정보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국한되게 되었다. 사회 일부 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정보접근능력 확보의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능력에 집중된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정보접근권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국한된 권리로 이해되는

체계적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모두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정보접근권은 마치 특수계층을 위한 권리에 불과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접근권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에서는 일부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정보를 향유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정보접근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더라도 정보접근능력은 모든 국민이 정보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단지 정보에 접근할 능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정보접근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미 정보접근이 가능한 계층이 갖는 정보향유권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는 모든 국민이 정보접근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유아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정보접근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정보향유권의 실현을 위한 기초적 정책수단이 된다. 이는 전통적인 정보취약계층이나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관점이 될 것이다.

### 3. 제2단계 - 정보수용능력

정보접근능력을 보유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정보를 자신이 소화할 능력을 보유하여야만 정보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정보접근능력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적인 정보통신기기 조작능력과 정보검색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정보수용능력은 정보를 검

색해서 그 정보를 수용하여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즐긴다든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다든가, 농업 또는 어업 종사자가 일기예보를 검색해서 농사일이나 출항을 결정하는 것이나, 인터넷으로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하거나, 현재의 교통상황을 인터넷으로 파악하여 우회도로로 운행을 하는 등의 능력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보수용능력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보조적인 역할이나 혹은 오락적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는 인터넷의 정치적 의사형성기능을 생각하면 정보수용능력은 일종의 참정권의 실질적 구현으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보수용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 형성되는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정보사회에서의 국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참정권에 극도의 제약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수용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실적인 정보향유권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정보수용능력을 보유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까지 정보수용능력은 정보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차원의 역량으로 이해되고 모든 국민이 이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수립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경쟁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었고, 아직 정보접근능력 조차 확보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존재하는 한도에서 여기까지 신경을 기울일 여력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보향유권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수용능력을 갖

추지 못한다면 정보접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한다. 사회전반에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네트워크를 설치하였지만 그것을 다룰 기초적인 능력만 있다면 사회적으로는 과잉투자이고 일종의 낭비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정보접근을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용능력을 확보해야만 된다. 정보수용능력이야 말로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구되어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향유권이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명제는 정보수용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정보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정보수용능력의 함양이라고 할 것이다.

#### 4. 제3단계 - 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 이야말로 정보향유권과 정보생활의 최상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정보에 접근해서 정보를 수용한 후 그 정보를 다시 발전시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능력이야 말로 정보향유권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접근능력이 정보접근을 위한 외적 환경에 중점을 둔 것이고, 정보수용능력이 정보의 이용을 통한 일상생활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정보활용능력은 산업적인 측면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활용능력은 정보주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정보사회의 경제적 동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현실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의 산업의 축은 이미 정보산업으로 이동한 상황이므로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수도 증가하고 정보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산업을 진흥하고 정보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도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보향유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보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창출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과거 정보격차해소에서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 새로운 정책내용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앱스토어와 같이 다수의 개발자들이 휴대전화에서 사용될 애플리케이션을 독자적으로 제작하여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통로가 개척되고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을 생각해보면, 정보활용능력이 정보향유권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쉽게 다가올 것이다. 정보활용능력의 배양은 정보주체의 개인적 역량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산업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새로운 정보가치의 등장은 모든 국민의 정보향유권을 한단계 높이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접근능력과 정보수용능력을 넘어선 정보활용능력도 정보향유권의 하나의 내용으로서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제4절 정보생활 공급 측면의 기반제공

### 1. 정보생활의 단계적 구분

국민의 정보향유권을 실현하여 완전한 정보생활이 구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보생활을 공급하는 국가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주체의 능력을 3단계로 구분하여 계층화하는 것처럼 국가가 정보생활을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단계화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정보생활의 주체이자 정보생활의 수요자라고 한다면, 국가의 역할은 정보생활에서 공급자의 측면에서 파악된다. 국민의 정보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정보생활을 지원하는 기반제공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는 크게 3단계의 정보생활 공급측면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주체의 정보접근능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정보주체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시설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보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하더라도 접근할 정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사회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접근할 정보콘텐츠를 충실하게 만드는 기반제공이 요구된다. 끝으로 정보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해당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보산업 지원정책이 기업 중심의 것이었다면, 국민의 정보향유권과 관련하여서는 개인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콘텐츠의 효율적인 마켓플레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개별적인 단계별로 상세하게 살펴본다.

## 2. 제1단계 - 접근 기반구축

국민의 정보생활을 위한 공급자로서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모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정보생활의 출발점이 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전 국민이 밀집하여 생활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이 정보인프라 구축에는 오히려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된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매우 넓은 국토에 국민이 낮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들고 그 투자 대비 효율도 매우 낮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좁은 국토에 높은 밀도로 거주하므로 투자 대비 효율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리한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미 전 국토에 고도화된 네트워크가 확산되어 있으므로 물적인 정보기반시설은 완비되었으며, 이는 이미 성과분석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지금까지 정보격차해소 정책이 집중하였던 특정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아직도 정보접근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결혼 등의 사유로 외국에서 이주해 온 정보접근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취약계층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이나 노령자처럼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정보소외계층도 그 수는 감소한다하더라도 여전히 정보접근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상당수가 남아있다. 나아가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현재의 아날로그 수신기로는 머지않아 더 이상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이는 지금까지는 정보접근능력을 보유한 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나 정보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퇴보가 초래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1단계의 기초적인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며, 또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격차의 재현 위험에도 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제2단계 - 지식 기반구축

정보향유권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보수용능력을 충족시키기 위

한 정보생활 공급은 정보콘텐츠인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접근할 정보가 없다거나 혹은 정보의 질이 형편없는 수준이라면 수용할 정보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접근 기반이 마련되었다면, 이제 향유할 정보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국가적인 역할이 부여된다.

정보나 지식을 창출하는 것을 모두 국가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일부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전국에 설치하고 국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에 접속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들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나 법제도를 형성하지 못하면 정보접근능력은 잠재화된 상태로 사장될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국가의 역할은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행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민간 영역의 정보생산에 대해서도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대해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민간이 생산한 정보나 지식을 법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틀을 정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러한 제2단계의 지식기반구축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진보된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정보격차해소에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보격차해소는 매우 협소한 패러다임이므로 이러한 지식기반구축에까지 그 영향범위가 미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생활의 패러

다임 그리고 정보향유권의 개념으로 발전된다면, 지식기반구축도 그 틀 속에서 파악되고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4. 제3단계 - 활용 기반구축

제1단계의 접근 기반구축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제2단계의 지식 기반구축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보격차해소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생활 및 정보향유권의 관점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정보의 향유 나아가 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는 단순한 정보의 소비주체가 아니라 정보의 생산주체로서 기능하게 되고 이는 Web2.0 그리고 프로슈머 개념을 통해서 이미 현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정보주체가 소비주체가 아닌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은 정보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지식정보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적 동력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과거와 같이 대규모의 산업시설 투자를 통해서 달성하여야 하는 산업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소규모의 조직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은 갈수록 주목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팟이나 아이폰에서 활용할 정보를 소규모의 개발자들이 경쟁적으로 만들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그 정보상품을 구매하는 앱스토어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KT에서 11월부터 앱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개인과 사업자 누구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 장터가 개설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편의성과 경제성을 얻게 되고 개발자는 수익성과 개발용이성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sup>94)</sup>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아직 명확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누구나 정보생산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고, 정보처리능력이 결국 산업적 생존능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관한 정책적 대응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 수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인지 국민이 정보생산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생활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통한 조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즉 개개의 국민이 정보향유권을 갖는 주체로서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보를 생산해서 이용자들과 어떠한 형태로든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94) 아이뉴스24, 2009년 9월 24일자 보도([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44957&g\\_menu=020300](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44957&g_menu=020300))

## 제5장 결 론

2000년대에 접어들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정보사회의 성숙속도 및 그에 따른 정보격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서 그 때 그 때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기존의 정책의 성과가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취약계층을 재설정하고, 세부적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 세부적 보완책은 정보격차라는 개념의 내재적 한계와 이념적 한계로 인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격차를 해소하거나 정보기회의 확대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전 국민의 정보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의 세부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현재까지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접근성의 분야에서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를 평가하였고,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 청각장애인의 통신중계서비스 사업 성과와 웹접근성이 얼마만큼 준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정보이용능력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층의 정보화교육, 다문화가정의 정보화교육, 수용자의 정보화교육 그리고 기타 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간 정보격차가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를 평가하였고, 향후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는 기업의 정보격차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가간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 기존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실용정책,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정보복지의 실현, 정부-민간 협력이라는 4대 정책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농어민층 및 장노년층과 다문화가정을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재설정하고, 디지털 TV와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 대응한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세부적 보완책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부적 보완책은 기존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정보복지를 실현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부적 보완책은 정보격차라는 개념의 내재적 한계와 이념적 한계로 인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격차를 해소하거나 정보기회의 확대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전 국민의 정보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새로운 지향점을 도입하기 위해 현행 "정보격차" 개념의 협소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좁은 의미의 정보격차는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소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정보격차 개념을 발전적으로 폐기하고 "정보생활"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정보향유권"이라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정보향유권의 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 정보사회의 행복추구권, 정보향유의 평등권, 인간다운 정보생활을 할 권리로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국민의 정보향유권이 실현되는 정보생활을 완성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수요측면의 정보능력으로서 "정보접근능력", "정보수용능력", "정보활용능력"을 단계화하여 체계화 하는 동시에 정보생활 공급측면으로서 국가의 "접근 기반구축", "지식 기반구축", "활용 기반구축"의 3단계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정보통신망과 시스템, 그 안의 정보는 단순히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환경의 도래는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따르는 역기능도 예견된다. 특히 인간의 모든 생활이 정보통신망과 시스템, 그 안의 정보에 의존하여 영위되므로, 이러한 환경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존확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 모두에게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구현하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기를 염원하면서 보고서를 맺는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고영삼(2006). 「유비쿼터스 시대 정보문화의 지형과 정책과제」, KADO 이슈리포트 06-01(통권 25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김문조 외 (2007). 「정보문화지수체계 개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김문조·김종길 (2002). 정보격차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36:4, 123-155.
- 김문조·박형준 (1996). 정보화사회의 부작용과 사회정책의 방향. 「정책포럼」 20집.
- 김정언 외, 고령화와 정보격차 : 정보격차의 결정요인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 김형양(2006).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 형성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1호(2006 봄). 한국지방정부학회.
- 오병철외(2005). 효율적 정보격차해소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05-1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민식(2000).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피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봉건(1999). 『사이버공간에서의 중독; 통신, 인터넷 중독증의 증상과 예방, 사이버 공간의심리』, 서울: 박영사.
- 이종순(2004), 정보격차를 넘어 평등사회로-농촌과 도시 간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임학순(2005).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 학습프로그램의 문화거버넌스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임희섭(1995). 정보화사회의 사회구조. 최정호 외 편. 「정보화사회와 우리」. 소화.
- 장영민(1998). 「정보사회의 법의 변용」,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 (I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희태(1998). 사이버공간의 일탈행동과 인터넷 정보컨텐츠의 등급평가 기준. 「정보화저널」 5:2.
- 최남희, “u-도시 패러다임의 구상과 도시공간의 재창조 : 유비쿼터스 도시의 개발 모델 정립”,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5권 제1호.
- 최숙희, 정보격차해소와 민간협력, ISSUE REPORT 05-10
- 추병완(2001). 「정보윤리교육론」. 울력.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2009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백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 허영(2002). 「한국헌법론」, 박영사,
- 홍성욱(2002).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 황승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국외 문헌

- Benedikt, M. (ed.) (1994). Cyberspace: First Steps.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Beniger, J. (1986). The Control Revolution: Technological and Economic Origins of Information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 Jones, S. G. (ed.) Virtual Culture: Identity and Communication in

- Cybersociety. London: Sage Publications, 80-101.
- Mark Weiser, The Computer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cientific American 94-10, 1991.
- Schuler, D. (1994). Community Networks: Building a New Participatory. Medium. Communications of the ACM 37:1, 39-51.
- Schuler, D. (1996). New Community Networks: Wired for Change.
- Schmitz, J. (1997). Structural Relations, Electronic Media, and Social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Webster, F. (1995). Theories of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 Wellman, B. et. al. (1996). Computer Networks as Social Networks: Collaborative Work, Telework, and Virtual Commun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213-238.
- Whittle, D. (1997). Cyberspace: The Human Dimension. New York: W.

## 기타

아이뉴스24, <http://itnews.inews24.com>

최진봉(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의 프레시안의 기사.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621132324&section=06](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621132324&section=06)

##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

2009년 12월 인쇄

2009년 12월 발행

발행인 : 김 성 태

발행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시 중구 무교동 77번지

전화 : (02) 2131-0114

인쇄처 : 호정씨앤피

전 화 : (02) 2277-4718

---

<비매품>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 내용에 대해 무단전재(無斷轉載)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